

국감 2주차 격돌...여야 대치에 여당 내부도 복잡

14개 상임위 국정 점검...사법·부동산 등 쟁점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회 최대 변수령

문체위 영화 ‘암살자(들)’·농해수위 농지조사대립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등 복잡한 기류가 감지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 2주차에도 검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 전반을 점검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12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북부경찰청(13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15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부담과 권한 확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데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질의와 공방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지사가 출석하는 만큼 여야가 상대 진영의 공역단체장을 겨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부동산 공급 문제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추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잇달아 비판했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이목은 오는 14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인 여야 간 공방에 더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까지 불거졌던 만큼 복잡한 대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그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자를 엄호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자 당 지도부도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고 인사청문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은 넘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청 출범과 후보자 인선 과정을 문제 삼아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의 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ETF)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금융법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며 관련 사안의 책임 규명을 압박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구례 화엄사 괘불재 참석한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사에서 열린 제22회 화엄문화재 괘불재에서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우석스님, 김민

석 대표, 장길선 구례군수, 전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연합뉴스

문금주 “저수지·용배수로 사망사고 급증”

낙시·어로·실족·추락...전체 79% 차지

“위험 요인 분석·맞춤형 예방 대책 절실”

전국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으로, 최근 6년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



고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상사고도 2건 발생했다.

연도별 사망사고는 2021년 3건, 2022년 9건, 2023년 6건, 2024년과 2025년 각각 5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9월까지 14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사망사고의 약 28배에 달했다.

사고 장소별로는 저수지가 3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용·배수로 9건, 양·배수장 2건, 기타 시설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14건 가운데 11건이 저수지에서 발생해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어로·낙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족·추락 14건, 음주 5건, 물놀이 4건 순이었다. 어로·낙시와 실족·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 만큼, 낙시객과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이용되는 시설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만큼 사고가 반복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낙시·어로와 실족·추락 등 주요 사고 유형에 맞춘 예방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상반기 고공단 승진 244명...“인사 적체 심각 허위”

박균택, 인사혁신처 자료 분석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산갑)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올해 상반기 3급에서 고위공무원 단으로 승진한 인원이 244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승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반기 실적만 집계한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였던 2023년 한 해



승진 인원인 202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3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인 고위공무원 7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2023년에는 해당 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8년7개월이 소요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평균 8년으로 7개월 단축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연구단체 17개...정책 대안 모색

재적의원 91명 중 84명 참여

물관리·산업전환 등 현안 중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물 관리와 산업 전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 발굴에 나서고 있다.

11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2026-2027년 활동하는 의원 연구단체는 모두 17개로, 재적의원 91명 중 84명이 참여한다. 통합 물 관리

와 주력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활용 농업, 지역경제, 응급의료 등 연구 분야도 다양하다.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5일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첫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경영애로와 지원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지역내 소비와 소득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업체 정보등록체계 구축, 공공기관 구매연계 강화, 지역화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 통합 물 정책 연구회’는 지난 7일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통합 물 관리와 효율적인 용수 배분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같은 날 ‘전남광주 주력산업 혁신 연구회’는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뤘다.

‘스마트양식 미래전략 연구회’도 이날 정책 연구용역 방향을 검토했다. 고수온·적조와 어가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양식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2일에는 ‘개발이익 시민환원 활성화 연구회’, 13일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연구회’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명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